

투데이 칼럼

제4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취임이 원전 주변지역에 주는 의미는?

지난 1월 2일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취임했다.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원안위가 원자력안전의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원안위 수장 교체가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원전 안전에 있어 국가와 원전 주변지역 주민간 신뢰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원안위 출범 전에 우리나라는 원자력 진흥 업무와 원자력 규제 업무를 하나의 부처가 맡고 있어 업무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그리고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전담하는 원안위가 2011년 10월에 조직됐다.

그러나 조직된 이후에도 원안위는 원전 진흥 정책에 밀려 부실 점검으로 안전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심지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대변인' 또는 '방재막이'라는 불명예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를 얻었다.

신임 위원장의 "원전 안전에 있어 양보는 없다"라는 강한 다짐에서 과거 원전진흥과 경제성을 이유로 주민 안전이 얼마나 소홀히 취급되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전 안전에 있어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첫째는 한수원과 원안위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것이다.

방사능 특성상 뒤늦게 공개하는 것은 의혹만 키운다. 다행히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개와 소통프로그램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한수원 방재대책 범위를 원전 반경 10km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원안위 소관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과 '주요 방사능감비 시설·장비 물품 확충기준'에 원전 반경 5km 이내는 한수원이 방재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시 바람 방향과는 상관없이 10km 이내 지역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출입 통제되고 있다.

5km 이내 설정은 한수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지언정 주민보호에 있어서는 너무나 협소하고 미약했다. 한수원의 관리범위를 10km까지 확대하여 사고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는 방재대책 재원미련 지원이다.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의 경우 방재 의무만 주어져 있을 뿐 재원미련 대책이 없다. 경로당 복지예산 등 일반예산을 아껴 방사능 방재대책에 투입해야 할 실정이다.

원전 인근의 지자체로서는 설사가와 원전 안전이 맞지 않는 격인 것이다.

원안위는 방사능 방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지원시설 등을 통해 방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원안위 현안업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안전 전문가를 원안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소외됐던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강정민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원안위가 '소극적이다. 안이하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원자력 안전의 수호자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국가 균형발전, 이제 동서발전을 축으로

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 비전선 포식에서 한 발이 올림이 크다. 도지사는 국가의 발전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을 축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왔다면 이제는 동서를 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분단 이후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남북을 축으로 발전의 관도를 그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대구와 부산이 비대해졌고 중간 지점의 신도시 대전이 광역시로 급성장했다. 1949년에 전주와 시로 승격되었을 때 대전은 이쪽의 태인과 함께 읍으로 발돋움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 옛적의 일이라도 격세지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지금은 동서 발전을 축으로 지방 발전을 도모할 때이다. 우리 전북의 경우는 동쪽이 경북이고 경남이다.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북과 경남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북과 경남도 공감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함께 추진하는 게 전북 발전의 절경이 되리라는 판단이다. 그러려면 동서 철도 건설 등 현안을 두고서 머리를 맞대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도민의 숙원은 그 언제나 전북 발전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해방양수의 정신이 필요하다.

본보가 사설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했거나 그 실상을 보자면 아쉬운 게 하나들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거나 지금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할 때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신에는 자존심도 필요하다. 예전에 도세가 전북보다 못했던 지역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 예전에는 전주의 절반도 안되던 수도권의 읍 단위 도시들이 이제는 전주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 충청도의 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따라잡았거나 곧 추월할 기세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 지역은 거주 인구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쪽은 감소 상태라서 여간 서운하고 답답한 게 아니다. 전북도는 그 책임이 크다. 며칠 전에 전북도는 '스크럼 행정'을 말했다. 그러므로 지역 발전을 위해 도내 각 시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운데 리드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도지사가 말한 국가 균형발전의 틀을 동서로 돌려놓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오랜 낙후 때문에 도민들은 상처가 깊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적스러움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북도가 맹행처럼 역량을 한껏 발휘해 주기 바란다.

3대 공공기관 신설법 통과 위해 뛰어라

전북도가 좀 더 뛰어아겠다. 지역 발전을 견인해줄 3대 공공기관 신설법 말이다. 이날 말일까지가 올 상반기 임시회의 예정 일자이다. 전북도는 이번에 정말로 실력 발휘를 해야겠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지난 연말에 턱걸이 수준에서 안타까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이번에 3대 공공기관 신설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번에도 밝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간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익히 잘 알고 있겠거니와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이 멈춰버리면 그에 따른 후속 사업들도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들이 거듭해 지연되면 낙후만 예정돼 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이번에 또 다시 힘내야 한다. 고장의 오랜 낙후는 도민의 정서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도내에는 유명무실한 사업들이 적지 않다. 말로만 현안사업이지 정채된 사업들이 아닐 수 없다. 도민들은 탄소중립원 설립법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를 바란다. 역시나 국민연금 대학원 설립법도 그렇다. 특히 새만금공사

설립법은 그 기대가 더 컸었다. 전북도는 힘내야 한다. 이대로 터덕거리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전북도가 더 힘내지 않는다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이 언제 성취의 모습을 보여줄지 전망하기가 어렵다. 예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정서시대라면 진작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들이 답답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전북도의 관계자들은 못마땅해 할 지도 모르겠다. 애를 써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다.그래도 이같은 지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뛰기는 뛰어도 낮은 자세만 보여주는 까닭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 한참 낙후돼 있다.

전북도는 발전 현안의 힘찬 추진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겠다.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든다고 도민들이 여러 번 지적해 왔거나 전북도는 지역의 당면한 발전 현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내야 한다. 이날 2월에는 설 연휴 기간이 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긴장해야 한다. 3대 공공기관이 순조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더욱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독자제언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영화 1987이 인기 상영 중이다. 영화의 인기만큼이나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인권은 물론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두고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지원제도와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계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경제적 지원, 심리적인 치료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회복 과정을 확인하여 정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도끼는 잊어도 도끼에 찢힌 나무는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인식의 전환이아말로 피해자들이 평안한 일상을 되찾는 데 가장 유력한 치유방법일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해 국민에게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김정아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순경

독자제언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얼마 전 방송매체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앞날이 찬찬한 대학생이 음주사고를 당해 다리를 심하게 다쳐 평생 의족에 의지 한 채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 방송되었다.

이 사고로 모든 꿈과 희망이 좌절되었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절규를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음주사고는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불의의 음주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가족들은 소중한 부모, 자식들을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음주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은 외할 곳 없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자신보다 더 아끼던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자식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평생 묻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한잔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인기

적인 생각이 이렇듯 소중한 이들의 생명과 삶을 파타르도록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경찰은 '음주운전사법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형 기준을 강화하고 동승자 등 방조범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있지만 운전자 개개인의 확고한 의지도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술자리에는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기로 다짐하고 지키고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인 동시에 자살행위임을 명심하고 순간의 실수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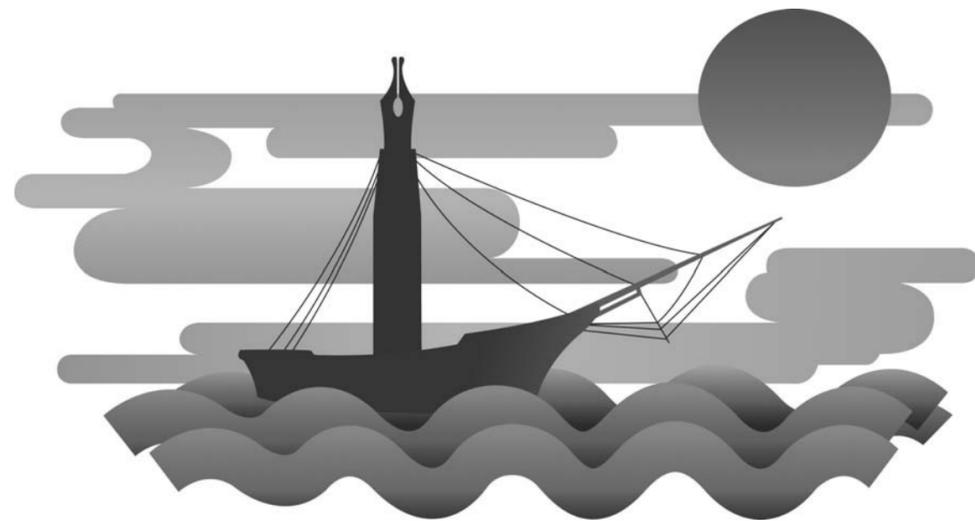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활동대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